

광주 반려동물 급증에도 장묘시설 없어 '원정 장례'

전남 민간업체 4곳·광주는 전무 타지역 장거리 이동에 불편 호소 동물사체 불법 투기·매립 부추겨 광주시 "시설 마련 추가 용역 중"

"가족인데 쓰레기봉투에 버릴 순 없잖아요.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네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임모(28)씨는 지난 1월 3년간 함께했던 강아지 '행복'이를 떠나보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픈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급하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아 나섰지만, 당장 광주에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애를 먹었다. 그나마 가까운 전남지역 민간 시설에 문의했지만, 예약이 꽉 차 다음날이 되고 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지역에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시설은 한 곳도 없다. 광주 시민들은 반려동물 사후처리를 위해 전남이나 타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누적 등록 건수는 2019년 4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기준 8만여 마리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당국은 반려동물 치료비, 펫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늘었음에도 반려인들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에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때 당장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대다수 반려인들은 전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가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키우던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야산에 투기, 매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을 한 광주지역 응답자 중 65.5%가 반려동물 사체를 직접 땅에 묻었고 8.6%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했으며, 5.2%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상당수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광주 남구는 지난 23일 자치구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등에 나섰다. 남구에 거주하는 반려인은 여수의 민간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하면 장례비 할인과 봉안당 무료 안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반려인의 동물화장 민원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여수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푸른솔과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렵게 마련된 지원책이지만 남구에서 약 100km 떨어진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해야 혜택이 적용돼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산구에서 지난 2022년 한 민간 업체가 동물 화장터를 마련하고자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여수와 함평, 순천, 목포에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 장묘업체 4곳이 있다. 해당 업체에서는 하루에 4~6건 정도의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반려동물복지지원시설'은 화장장과 놀이터, 입양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 시설로, 올해 3월로 타당성 연구용역

이 마무리될 방침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추가 용역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내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둘러 반려동물 복지 시설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설기관과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지원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정상이기자 sanga.jeong@jnilbo.com



무더위 쉼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9일 광주 임동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한 경로당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과 임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쿨스카프와 부채 등을 나눠주고 냉방기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폭음·폭탄주 지고 이제 '잔술의 시대'

정부 28일부터 술 한잔 판매 허용 "소주 800원·막걸리 1000원 적정"

"이모, 여기 소주 한잔 주세요!"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잔 판매가 불가능했다. 시민들은 '얼마에 마셔야 하나'고 궁

금해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

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은 칵테일·생맥주의 잔술 판매는 가능했다. 그러나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의 잔술 판매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판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명확히 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한 건 소비자들이다.

직장인 정모(31)씨는 "회식을 하다 보면 소주 반 병이 남을 때가 있다. 항상 이를 처리하는 게 곤혹이었다"며 "이제는 진심으로 '한 두잔만 더 하자'고 할 수 있어 기대된다. 값이 문제일 터인데, 주종별 잔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모 경제학 교수는 "한국인들은 회식 문화가 많다. 잔술이 사회에 자리 잡히게 되면 정확한 금액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며 "추측해보면 소주 800

원, 병맥주 2000원, 막걸리 1000원 등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 막걸리의 경우 타 지역에서 이미 이 가격에 잔술 판매를 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정성현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